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엄정 대응

이억원 기재부 차관, 거시경제회의 “내주 중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제정”
美, 이달말 테이퍼링 개시 결정에
국채시장 안정위해 2조 긴급 바이백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빌딩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경유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에 사재기까지 겹치면서 폭리를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다음 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설 계획

국내에서는 요소수 품귀 현상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더구나, 요소수 부족으로 화물차 운행이 제한되면서 물류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개시 결정에 대해 국채시장 안정을 위한 2조원의 긴급 바이백(매입)을 실시할 방침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3일(현지시간) 이달 말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미국 테이퍼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며 “2조원의 국채 긴급 바이백을 통해 선제적 국채시장 안정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방안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서민·취약계층 중금리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연중 약 42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내년에도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 6조원 규모 저리 긴급자금 대출과 2조 4000억원 규모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112만 농가에 공익직불금 2.2조 지급

농식품부, 오늘부터 지급 시작
1곳당 평균 지급액 200만원 수준

농업인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공익직불금 2조2263억원이 112만3000여 농가·농업인에 지급된다. 평균 지급액은 약 200만원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시행 2년차인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1만 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6853억원(67만2000명) 규모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000건 증가했다. 다만, 지급 면적(108.3만ha)은 작년(112.8만ha)보다 약 4만5000ha 감소했는데, 이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자연 감소, 신

규 농업인 진입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작규모별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390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24.2%를 차지, 작년 동일 구간 대비 1.8%포인트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에는 1조6012억원(총액의 71.9%)이, 밭에는 6251억원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 실경작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거대 플랫폼, 오징어게임 1번 참가자 같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중적 지위 악용 경쟁 왜곡”



용하여정당한 경쟁이 아닌 자신의 정한 기준에 따라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1번 참가자가 거대 플랫폼사와 같다고 비유했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사에서 “거대 플랫폼들은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하여 노출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면서 “오징어게임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1번 참가자와 같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의 주최자와 선수를 겸하는 1번 참가자는 줄다리기의 승리와 노하우를 자신의 팀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나온다”며 “그 덕에 1번 참가자가 속한 팀은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또 “자신의 짝꿍인 456번 참가자에게 게임을 고의로 저주거나, 게임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는 모습도 보인다”며 “결국 1번 참가자는 주최자의 지위를 악

용하여 정당한 경쟁이 아닌 자신의 정한 기준에 따라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배달 앱, OTT와 같은 플랫폼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다”면서도 “시장을 선점한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힘의 불균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전 세계 경쟁당국이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경쟁당국도 어느 경쟁당국 못지 않게 강력하게 경쟁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작년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서비스는 상단에, 경쟁사 상품·서비스는 하단에 노출한 행위를 조사해 시정한 바 있다”며 “최근에도 핵심 플랫폼에서의 노출 순위 결정 기준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렌터카도 대리운전 가능해 진다

공정위,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개정
사고·수리시 전후 증빙서류 요청 가능
점검표에 타이어·와이퍼 등 약관 추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둘째 날인 2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내 렌터카하우스가 여행객에 나선 가족과 친구, 연인들의 발걸음으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는 렌터카를 빌린 후 술을 마셨거나, 다쳐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수 있게 된다. 렌터카 사고·수리시 전후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차량수리비보다 많은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관련 약관이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렌터카의 대리운전 허용이다. 기존 표준약관은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외 제3자의 운전 금지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주취, 신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근거로 렌터카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운전자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은 가능토록 했다.

렌터카 사고·수리시 과도한 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우선 회사가 대여차량을 수리한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도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정비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렌터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

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따라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고시 내는 자기부담금을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해 소비자 부담을 제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계의 자기부담금은 평균 50만원 수준이나, 그간 이보다 적은 10만~20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경우도 회사가 요구하는 자기부담금을 소비자가 전액 지급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차량 인도시 점검도 지급보다 꼼꼼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차량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한 후 렌터카를 인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우, 안전벨트 등도 점검 항목에 포함했고, 이런 점검표를 아예 표준약관에 별표로 추가했다.

또 렌터카 인도 전 점검 등에서 발견된 정비불량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고객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조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이밖에도 기존에는 렌터카 회사가 고객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와 과거 대여요금 체납이 있을 때만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렌터카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고객이 협조하지 않거나, 과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면책금, 수리비 등의 체납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도 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사의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에 고객이 협조할 의무도 규정했다.

이번 개정엔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비자정책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공정위가 관련 사업자,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협의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환경부, 1회용품 ‘환경표지 인증’ 제외

보온·단열재 등 GWP 기준 강화

앞으로 일회용품에는 친환경 같은 ‘환경표지’ 인증을 볼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환경표지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 플라스틱, 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 일회용품은 환경표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생분해성 수지는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만 인증이 유지된다. 기존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은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이 강화된다. 지구온난화지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1kg 대비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 지표다.

예컨대, 세정제, 방향제, 광택제의 경우 지구온난화지수가 기존 1600에서 100으로, 바닥 장식재와 천장 마감재, 산업용세정제는 3000에서 100으로 각각 강화된다.

/세종=원승일 기자